

전주매일신문사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생·문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2일 목요일 (음 1월 6일)

제17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곧 입춘... 프리지아꽃과 함께 봄이 온다는 절기상 입춘을 앞둔 1일 오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실에서 프리지아 육성계통 품평회에 출품된 꽃을 연구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 농생명 · 식품산업 허브 도약 첫 발

전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연내 준공되고, 식품산업 집적화 기반구축을 비롯한 6개 기업지원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올해를 농생명·식품산업의 허브도약의 첫 걸음을 목표로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산물수출 증대 등으로 민선 6기 3년차 도정 목표 및 삼각농정 달성을 위해 1,347억원을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완공을 비롯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세한 식품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유망 아이템을 그 기업의 '효자상품'이 되도록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 도내 식품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전북을 식품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연내 준공 등에 따라 사업비 1347억원 투입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분야별 시책 추진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완공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정읍방사선센터와 함께 삼각벨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고부가 종자가 공처리리를 위한 종자가공처리센터 건립으로 2020년 국가 종자수출 2억불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스산업화센터가 오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발효원료기반 소스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 동반 성장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홍삼, 천마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역대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분야는 동부권 특화품목의 생산, 가공, 유통, R&D, 체험관광과 접목해 농가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청국장, 북

분자, 생강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필요한 농산물을 도내산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체계화해 도내 농업인 소득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완공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종자수출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0월 국내외 기업, 바이어 등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또한 올해 민간육종연구단지내 20개 기업입주를 완료하고,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종자가공처리센터 건립사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농자재분야에 국도비 49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지역 농식품, 한식 등 전통식품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다하고, 소비자, 바이어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농식품 소비환경 조성과 농가소득 향상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지원기관과 협업 강화 및 지역별 수출 경쟁력 있는 토마토, 멜론 등 전라품목을 발굴·중점 육성하고, 비교적 시장 경쟁이 적은 도내 영세 농식품기업·농업인 등 지원을 위한 바이어 초청행사나 공동 마케팅지원 등으로 수출 2.2억불 달성을 목표로 도내 농식품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니다"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

### 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특검법 2조에 따라... 최순실도 블랙리스트 작성의 공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했다. 이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은 특검법 2조에 따른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낸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을 통해 "1월31일 김기춘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방어논리를 폈다"며 "특검은 특검법 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으로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2조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15개 항목으로 정했다. 특검법 2조 2호를 보면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혜의 공범으로 명시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한 사건인데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도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뉴스이

### "국정교과서 최종본 '국민 모욕'"

도의회 "즉각 폐기" 촉구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도의회가 '국민 모욕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1일 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역사 왜곡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부의 어깃장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교과서 강행은 국민의 동의와 교육계의 합의가 없는, 그야말로 몰락하는 정권의 국민 모욕주기 행태"라며 "불러하는 정권이 오

기와 어깃장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교육 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는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종본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범용 계승이라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식민시대 친일과 부역으로 민족을 배신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애국지사들에게는 그들의 투쟁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으로 역사왜곡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국민적 동의나 명분 없는 국정교과서 강행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인재용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